기획예산처 보도설명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배포 2026.11.26.(목) 보도 배포시

내년 지방교부세는 '26년 대비 7.8조원 증가하는 등 지방이 쓸 수 있는 재원이 확대됩니다.

< 보도내용 >

□ 2026.11.26.(목) 서울경제는 「세수 믿고 늘린 출산지원금…"지방부터 중단될 수도"」 제하의 기사에서, "정부의 '혼인·출산·입양 지원사업'이 내년 10월 이후에는 정상 가동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6조1,000억원의 재정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지방정부에도 사업비 일부를 부담하도록 했으나, 10월 이후 지방정부의 곳간이 비어버릴 수 있다."고 하면서,

○ "새로 생긴 지원금의 최소 35%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한다.", "내년에는 지방재정이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맞춰 추가세수를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조성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 사업에 부담해야 하는 지방비가 계속 늘어나면 지자체 재정이 증발하고 자체사업 여력도 줄어들 수 있다."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기획예산처 입장 >

□ '혼인·출산·입양 지원사업'의 국고보조율은 기존 저출생 대응 현금성 지원사업의 보조율과 동일하게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동 사업의 지방비 부담보다 훨씬 큰 규모로 지방의 가용재원이 확대됩니다.

* 혼인지원금·출산지원금 보조율(^{서울}35, ^{지방}65±10%)은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와 동일
아동기본수당 보조율(^{서울}50, ^{지방}70±10%)은 아동수당과 동일

○ ’27년도 지방교부세는 77.2조원으로 ’26년 본예산 대비 +7.8조원 증가(+11.3%)하며, ’26년과 ’27년 세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8년 이후부터는 지방교부세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지방교부세 예산 및 전망(조원): ('26년) 69.4 ('27년) 77.2 ('28년) 101.0 ('29년) 117.1 ('30년) 120.7

○ 또한,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에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방미래성장 지원금(’27안 3.5조원)을 반영함으로써 지방정부 가용재원을 확충하였습니다.

□ 아울러, 정부는 지자체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매칭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중입니다. ’27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보조율 인상·자부담 인하 등 지방우대원칙을 본격 적용하여, ’26년 7개 시범사업(7.7조원)에서 ’27년 61개 사업(16.8조원)으로 대상 사업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 정부는 지자체 보조사업 편성 시 지방정부의 매칭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방정부 재정보강 방안도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담당 부서	기획예산처 예산실 국민복지예산과	책임자	과 장	진민규 (044-214-2910)
		담당자	사무관	김진수 (kimjinsu@korea.kr)
	기획예산처 예산실 지방재정팀	책임자	팀 장	박민정 (044-214-3190)
		담당자	사무관	고병국 (kobk22@korea.kr)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